

No. 2013-24

일본 경제 동향

(Japan Weekly Economic Digest)

2013. 06. 10

- ① 일본경제지표
- ② 주간경제이슈
: 일본의 경제운영방침과 성장전략
- ③ 경제정책동향
- ④ 일본기업동향
- ⑤ 한국관련워치

1 일본경제지표

□ 주간 시황지표

- 엔화환율 : 유럽중앙은행(ECB)의 추가 금융완화 보류에 따른 달러화의 매도 움직임이 엔시장에도 파급됨에 따라 한때 95엔대까지 상승
- 장기금리 : 주가의 대폭락으로 안전자산인 채권에 대한 매입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지난주보다 낮은 수준

구 분	6.3(월)	6.4(화)	6.5(수)	6.6(목)	6.7(금)
엔화의 대미달러화 환율(달러당)	100.45	99.74	100.29	99.30	96.50
엔화의 대원화 환율(100엔당)	1,120.21	1,131.55	1,119.39	-	1,151.32
닛케이평균주가(종가)	13,261.82	13,533.76	13,014.81	12,904.02	12,877.53
장기금리(10년물 국채금리, 연리%)	0.805	0.890	0.855	0.835	0.860

□ 주요 거시경제지표

- 4월중 소비자물가는 전월에 이어 계속 상승
- 5월중 달러대비 엔화 환율은 전월보다 엔저, 장기금리는 상승

구분	2011	2012	2013				
			1월	2월	3월	4월	5월
실질GDP증가율(연율,%)	0.3	1.2(2.0)	3.5			-	-
수 출(천억엔)	653	639(637)	48	53	63	58	-
수 입(천억엔)	697	721(707)	64	61	66	67	-
對한국 수출	52.1	49.7(49.1)	4.01	4.25	5.21	5.07	-
對한국 수입	32.9	32.8(32.4)	3.12	2.92	2.81	2.58	-
직접투자(억달러)	(1,157)	(1,223)	226			-	-
對한국 투자	(24)	(40)	7.5			-	-
소비자물가(%)	0.0	▲0.2(0.0)	▲0.3	0.1	0.3	0.3	-
실업율(%)	4.5	(4.4)	4.2	4.3	4.1	4.1	-
경상수지(천억엔)	76.2	42.9(47)	▲3.6	6.4	12.5	-	-
엔화 對미달러 환율	79.1	82.9(80.1)	89.2	93.2	94.8	97.7	101.08
對원화(100엔)	(1,391)	(1,413)	1,197	1,166	1,161	1,148	1,100
외환준비고(기말 천억달러)	12.9	12.5(12.7)	12.7	12.6	12.5	12.6	-
국채금리(10년, 연리%)	0.985	0.560	0.740	0.665	0.560	0.600	0.860

주1) ()는 역년(1~12월)기준

2) 소비자물가, 실업률, 환율은 기간평균, 자료: 닛케이신문, 재무성, 한국은행

□ 주요 보고서 워칭 사이트(report watching site)

- 『또 하나의 엔고가 우려 : Global Market Outlook』 제일생명경제연구소, 6월6일
*출처:http://group.dai-ichi-life.co.jp/dlri/shima/pdf/s_1306c.pdf
- 『2013년 모노즈쿠리백서』 경제산업성, 6월7일
*출처:<http://www.meti.go.jp/report/whitepaper/mono/2013/index.html>
- 『골태(骨太) 방침(초안)』 내각부, 6월7일
*출처:http://www5.cao.go.jp/keizai-shimon/kaigi/minutes/2013/0606/shiryo_02.pdf

② 주간경제이슈 : 일본의 경제운영방침과 성장전략

□ 경제재생과 재정건전화의 양립

- 일본정부의 중기 경제재정 운영방향을 제시한 「호네부토(骨太) 방침」 초안이 확정, 6일 경제재정자문회의를 거쳐, 14일 각의에서 결정될 예정
- 골자는 경제재생과 재정건전화의 선순환에 대해 명기하고 경제재생과 재정건전화를 양립해나가겠다고 강조한 점임
 - 일본은행의 대담한 금융완화, 일본정부의 기동적인 재정정책, 성장전략 등 3개 화살의 효과가 이어지기 위해서는 재정건전화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건전재정의 바탕위에서 강한 경제를 실현한다는 목표 하에 경제재생과 재정건전화의 양립에 대해 강조
 - 재정재건지표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기초재정수지를 2020년도까지 흑자를 달성하여 국제공약을 이행하겠다고 명기하고, 목표달성을 위해 의료, 간병, 연금 등의 사회보장지출에 대해서도 성역 없이 재검토해 나간다는 방침

□ 재정건전화, 금리상승의 방파제로 성장전략에 필수

- 6월 5일, 성장전략 제3탄이 발표됨에 따라 경제재정자문회의 의원들은 성장전략을 궤도에 올려놓기 위해서는 재정건전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
 - 이토 모토시게(伊藤元重)도쿄대학 교수 등 민간의원들은 기업의 설비투자에 악영향을 미치는 장기금리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네 번째 화살로 재정재건에 강력 대처할 것을 주장하고, 사회보장비 등 의무적인 경비와 지방 세출을 억제하는 동시에, 정책 실시에 있어서도 PDCA(계획, 실행, 검증, 재검토)에 철저를 기할 것을 제언
- 구체적인 방안으로 고령자의료비의 자기부담비율에 대한 재검토 외에, 부정수급이 문제가 되고 있는 생활보호방식도 조기에 재검토할 방침
 - 지방정부의 재정재건을 지원하기 위해, 행정개혁 등을 추진하는 지방정부에게는 지방교부세를 우선 배분하는 새로운 방식을 도입
- 참의원선거를 앞두고 자민당 내에서는 재정건전화 노선을 강조하는데 대한 경계의 목소리가 있는 한편, 재정건전화 의지가 없으면 아베노믹스가 실패한다는 재정규율 필요론을 펴는 목소리도 있음
 - 이와 관련하여 니시무라(西村 康稔) 내각부부대신은 재정건전화의 필요성에 대해 변한 것이 없다고 전함

<경제재정운용 기본방침과 성장전략>

경제재정운용 기본방침	성장전략
총론	제 1단계 : 여성 및 청년 활용
-중앙정부·지방정부의 기초재정수지적자 (대GDP)를 2012년까지 흑자화	-5년간 대기아동제로 환경정비
-향후 10년간 연평균 GDP성장을 실질 2%, 명목 3% 목표	-성장산업의 재취직 지원조성금 확충
-성장전략의 주요 정책효과를 점검	제 2단계 : 기업·농업 활성화
사회보장	-민간리스회사가 기업에 설비를 리스해주기 쉽도록 하기 위한 보장제도 창설
-급부와 부담에서 세대간 공평성 확보	-지자체가 경작포기 농지를 집약, 농업생산 법인에 임대제도 창설
-고령자의료비의 자기부담비율 재검토	제 3단계 : 공공사업에 민간 활력
-생활보호 가산제도와 급부수준을 재검토, 부적정한 급부를 시정	-성장시나리오 실현으로 1인당 국민소득을 년3%이상, 10년 후 현재보다 150만엔 이상 증가
공공사업	-향후 10년간 전력관련 투자를 지금보다 1.5배인 30조엔으로 확대
-공항, 상하수도, 도로운영권을 민간에 매각	-최신기술을 활용한 인프라 정비로 수명 연장을 목표로 한 기본계획 책정
지방재정	-농지이용 전자지도 정비
-지방교부세의 비교부단체 수를 축소	
-경제 활성화 및 세출삭감을 추진한 지자체 우대	

□ 향후 10년간 연평균 실질경제성장을 2% 목표

- 2022년까지 10년 동안 연평균 실질2%(명목3%)의 경제성장을 목표
 - 아베정부에서 중장기 성장목표를 제시한 것은 처음이며 금융완화와 성장전략을 발판으로 투자와 소비를 끌어올려 디플레이션에서 탈출하겠다는 의도
 - 이를 위해 노동생산성 증가율도 중장기적으로 2%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음
- 과거 10년 동안 연평균 실질성장율이 1%미만인 점에 비추어, 2%라는 버거운 목표 달성이 성장전략의 초점이 되고 있음
- 성장전략에 대해서는 분야별 정책과 구체적인 수치목표를 담은 포괄적인 성장촉진책으로서 방향성은 평가할 수 있으나, 높은 수치목표를 열거했을 뿐, 실효성 있는 정책이 부족한데다, 2020년 이후의 장기목표가 많아 디플레이션 탈출의 길이 보이지 않는다는 평가

③ 경제정책동향

□ 아베 총리 제3탄 성장전략 발표

- 아베총리가 6월 5일, 제3탄 성장전략을 발표함에 따라 제1탄(4.19), 제2탄(5.17)에 이어 전체적인 성장전략이 완성
 - 아베총리는 전략, 의료, 인프라 정비 등 공공사업 분야에서 규제개혁과 특구 창설을 추진하고 민간의 활력을 활용할겠다는 방침을 제시하면서, 민간 활력이 아베노믹스의 엔진이라는 점을 강조
- 전력분야는 소매의 전면자유화와 발·송전 분리를 중심으로 한 전력시스템 개혁을 추진하는 한편, 풍력 및 지열 등 재생가능에너지의 발전시설분야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환경평가기간을 단축
 - 전력관련 투자를 향후 10년간 과거의 1.5배인 30조엔 규모로 늘리겠다는 것
- 의료분야는 건강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건강·예방서비스 분야에 대한 신규 참여자를 법적으로 인정하는 제도를 정비
 - 건강산업과 의료행위 간의 구분을 명확히 하여 사업하기 쉬운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, 건강보험조합 등에 질병예방에 대처토록 요구
- 일반의약품의 인터넷 판매는 소비자의 안전성을 확보하면서 해금할 방침을 제시
 - 보험외 선진적인 의료를 보급하기 위해 병원 부담이 큰 신청절차를 국가가 전면 지원할 방침
- 인프라 정비 분야는 노후화된 수도권 고속도로에 공중이용권을 도입, 민간자본을 유치하겠다는 방침도 제시
 - 국가전략특구는 도심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용적을 규제를 완화
 - 외국인 의사의 일본 내 의료행위를 인정하는 한편, 국제학교 설립이 쉽도록 해 줌으로써 외국인들이 일본에서 사업하기 쉬운 환경을 조성
- 6월 5일, 발표한 제3탄 성장전략에 대해 부정적인 시장의 반응이 나오자, 아베총리는 7일, 기업의 생산설비 갱신 및 사업재편 촉진을 위한 투자 감세를 실시할 방침을 표명하고 구체적인 방안은 금년 가을에 결정한다는 내용을 추가할 뜻도 비침
 - 그러나 법인세 인하는 추진할 의향은 없는 것으로 관측

4 일본기업동향

□ 2013년도 일본기업의 설비투자동향

- 닛케이신문이 발표한 2013년도 설비투자동향조사에 의하면, 전산업 기준으로 기업들의 투자계획은 2012년도 실적 대비 12.2% 증가
 - 일본정부의 경기자극책으로 부동산 및 소매 등 내수형 기업들이 적극 투자함에 따라, 대내투자는 2008년 리먼 쇼크 이후 가장 높은 10%의 증가율을 기록
 - 제조업은 북미 및 아시아지역의 투자가 활발한데, 앞으로는 주가나 신흥국경기 등이 계획 실행에 관건이 될 듯
- 4월 30일 시점에서 집계대상은 1,321개 기업, 응답이 없는 전력을 제외한 전산업의 2013년도 투자예정액은 24조 7,467억엔
 - 2013년도는 비제조업이 14.4% 증가하여 제조업의 평균증가율 10.8%를 상회
 - 업종별로는 부동산업이 아베노믹스를 배경으로 50.2%의 가장 높은 투자증가율을 보임
 - * 부동산업의 설비투자는 오피스·상업시설 개발이나 재개발프로젝트 관련 용지취득, 건물건설 등이 주된 대상
 - 소매업의 투자는 약 20% 증가
 - * 1,021억엔(69% 증가) 투자를 계획한 패밀리마트는 금년도 일본 내 입점이 과거 최대인 1,500개점, 금년 후반부터 소비가 활발해질 것이라는 것이 투자 이유
- 제조업에서는 해외투자가 약 20% 증가한 2조 7,390억엔으로 해외투자비율이 처음으로 40%를 초과
 - 경기가 회복중인 미국, 소비가 호조를 보이고 있는 동남아 등에 대한 투자가 활발한데, 환율변동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체제 구축을 위해 엔저하에서도 해외투자를 적극 늘리고 있음
 - * 혼다는 멕시코와 태국에서의 신규 그린필드형 투자가 확대, 대내외 합계로 17.9% 증가한 7,000억엔을 계획
 - * 도레이는 50% 증가한 760억엔 규모의 해외투자를 계획
- 일본기업의 설비투자는 전반적으로 엔저에 의한 수익개선 및 경기회복 등으로 투자의욕이 높아지고 있음을 반영
 - 그러나 주가나 장기금리 변동으로 투자의욕이 저하될 가능성과 함께, 신흥국 경기의 감속이나 유럽의 경기침체 장기화 등의 우려요소도 남아 있다는 지적

□ 일본 태양전지시장에서 외국제품과 경쟁 격화

- 일본 태양전지 시장에서 수입품이 늘어나면서 일본제품과의 경쟁이 치열
 - 한화그룹은 전년대비 8배, 중국에서 생산하고 있는 캐나다언솔라는 6배나 증가된 출하를 각각 계획
- 태양전지의 일본 내 출하량은 2012년도에 과고 최고치를 기록했는데, 외국기업의 시장점유율이 저가격을 무기로 20%를 상회
 - 기업에 따라서는 2013년도에 30%를 넘을 가능성이 있어 일본기업과의 경쟁이 격화될 것으로 관측
- 일본 태양광발전협회가 5월 31일 발표한 2012년도 출하량은 전년 대비 2.7배 증가한 380만kw로 과거 최고를 갱신
 - 일본기업의 해외생산 분을 포함한 수입 비율은 40%로 전년 대비 18%포인트 상승
- 한화는 2012년 6만kw에서 금년에는 50만kw(발전능력베이스)로 일본시장판매를 늘릴 계획
 - 작년 7월, 재생가능에너지의 전량매입제도 도입으로 일본 내 수요가 증가한 한편, 중국 공장에서 생산하고 있는 태양전지에는 EU의 반덤핑관세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판매처를 일본으로 변경
- 캐나다의 캐나다언솔라도 2012년 8만kw였던 대일 수출량이 2013년에는 35만~50만kw로 증가하였는데, 앞으로 발전효율을 높인 태양광발전패널을 투입하여 일본기업들이 강한 주택용 분야에서 시장점유율 확대를 목표
- 일본기업들도 파나소닉이 작년 말 말레이시아공장을 가동시키는 등 코스트경쟁력을 높여 대항하는가 하면, 샤프도 외부조달을 늘릴 방침
 - 외국기업들은 이제까지 일본산 태양전지보다 10~40% 저렴한 가격을 무기로 시장점유율을 확대해왔으나, 최근 엔저로 일본산제품과의 가격차이가 축소

5 한국관련워치

□ 한·일 관계 개선을 위한 방책 마련이 시급 (닛케이신문 사설)

- 한일이 내셔널리즘에서 벗어나 미래지향형 관계를 재구축해야 한다는 닛케이신문 논설위원의 칼럼에 이어, 이번에는 닛케이신문의 사설에서 냉각된 한일 관계를 경제, 안보 등의 협력을 통해서 양국간 마찰을 줄여 나가자고 제안
- 한일관계가 역사인식 문제를 둘러싸고 냉각되고 있는데, 양국이 경제관계가 깊고 북한의 핵문제 등 안전보장분야에서도 협력이 긴요한데 언제까지나 마찰을 계속할 때가 아니라는 것
 - 지난주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한·미·일 국방장관회의에 대한 의의와 성과를 평가하면서도, 당초에는 한국이 3개국 회의에 난색을 표명했으나, 미국의 중재로 실현된 점이 마음에 걸린다는 것
 - 더욱이, 일본측이 타진한 한·일 국방장관회의가 실현되지 못했는데, 이는 영토나 역사인식을 둘러싼 대립이 이어지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음을 반증
 - 여기에 그치지 않고, 한국정부는 4월, 아소 부총리 등 아베내각의 일부각료의 야스쿠니 신사참배에 반발하여 외무부장관이 방일을 취소하는가 하면, 침략에 대한 정의는 국제적으로도 정해지지 않다는 아베 총리의 국회답변 등도 문제 삼아 5월의 한·일 재무장관회의도 연기된 점을 지적
- 사설은 이 같은 한국측의 일련의 행보에 대하여, 박대통령이 이전부터 일본에 올바른 역사인식을 요구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, 한·일 장관회담 거부보다는 오히려 총리나 장관들이 직접 만나 대화를 해 나감으로써, 상호불신의 싹을 조금이라도 제거해가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지적
- 사설은 아베정권도 역사인식을 둘러싼 일련의 언동이 해외로부터 불신의 눈으로 보여 지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고 모든 외국, 특히 근린 국가들에 대한 배려도 필요하다는 것
- 한·일의 역사인식을 둘러싼 대립을 해소하기는 어렵다 해도, 경제나 안보 등에서 협력을 증대시킴으로써 마찰을 줄이는 것은 가능하다는 것
 - 한·일 FTA체결 본교섭이 오랫동안 중단상태에 있는 한편, 방위분야에서도 체결이 보류된 상태에 있는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 등은 북한 관련 정보공유에 필수
 - 지금이야말로 한·일 관계를 진전시키는 방책 마련을 서둘러야 할 때라고 강조